올 대입 정시모집 '등록포기' 금지

교육인적자원부는 1월 수시 1학기나 수시 2학기에 지원해 합격하면 반드시 1개 대학에 등록토록 한 수시모집 제도 보완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정시모집에 합격해 등록하면 등록포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4월 29일 발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시모집 등록포기 금지는 최근 수험생 수 감소로 신입생 모집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이 정시모집 등록마감 이후에도 추가모집을 통해 결원을 메우려하고 있으나 이때 이미 정시모집에 등록한 수험생들마저 등록을 포기하고 다른 대학으로 이동하는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2학년도 입시에선 서울대가 사상 처음으로 간호대와 농생대에서 추가모집을 실시, 상당수 상위권 대학 등록자들이 등록을 포기하고 서울대로 이동했다. 또 아주대, 건국대, 세종대 등 서울과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약 40여 개 대학도 5천명 이상을 추가 모집해 중하위권 대학 등록자들이 이들 대학에 지원하는 연쇄 이동이 일어나 대학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기도 했다.

내년 3월부터 대학 회사 설립 가능

2003년 3월부터 대학 부지에 산업체 연구소가 설치되고 대학이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별로 산학협력 사업을 전담 지원하는 별도 법인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세부시행 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2003년 3월부터 전국 국·공·사립대는 대학 부지(총 1억 3천만 평)내에 산업체 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소를 유치,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협동연구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또 교육 연구와 관련된 기업을 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기업' 제도도 도입돼 자동차정비회사(자동차 정비학과), 컴퓨터 관련기업(컴퓨터 관련학과), 제빵회사(제빵학과), 디자인용역회사(산업디자인과) 등의 학교기업에 민간자본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산학연 협력사업을 전담할 특수법인인 '산업협력단'을 총장 산하에 설치, 대학과 산업체가 동등한 법인으로서 정식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공대생 기업실습학점 인정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4월 27일 고려대에서 열린 전국공과대학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이공계 기피 현상과 산업기술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 5월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해 공대 학부생들이 첨단 기술업체와 연구소 등에서 6~12개월 가량 실무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학부생이 산학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에도 장학금을 주는 방안 등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신 장관은 또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에게 6~12개월간의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등 이공계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공과대 교과과정을 산업현장에 맞게 바꾸기 위해 일선 대학의 커리큘럼 개편과 시설 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연간 200억 원 수준인 산업기술인력 양성 예산을 내년부터 1천억 원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 공대 대학원의 산학프로젝트에 대해 70%는 정부예산에서, 30%는 기업에서 지원하도록 하되 기업 부담분은 전액 대학원생의 장학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 졸업생이 공

과대에 편입학할 경우 1년의 집중 교육을 한 뒤 산업체 현장근무 등을 통해 학사 학위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대 육성 특별법 제정 표류

지방대학의 숙원인 지방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표류하고 있다. 해 말 국회 교육위원회에 넘겨진 법안이 4월이 지나도록 의안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지방대 육성특별법 입법추진위원회(공동의장 윤덕홍)는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4월부터 5월까지 서울·경기를 제외한 7개 광역권별로 교수들의 서명을 받았다. 서명에는 4월 29일 현재 전국의 대학교수 등 1만 4천여 명이 참여했다. 특별법 입법화는 2000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방대 육성책을 발표하면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2001년도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가시화 됐다. 이후 전국의 지방대는 해 5월 총장 중심의 특별법 입법추진위와 교수 중심의 실무추진위를 구성, 공청회 등을 갖고 법안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해 12월 한화갑 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국가·자치단체는 지방대 육성을 위해 지원책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또 공무원(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 지방대생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고 자치단체는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 기타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법안은 교육위의 의안 채택 뒤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 교육위와 법제사법위 심의의결을 거쳐 본 회의에 상정돼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 교육비 GDP 10% 세계 최고

사교육비를 포함한 올해 우리나라의 총 교육비 지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10.5%인 62조 7,000억 원 규모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교육투자의 효율성은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8일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2002년도 예산개요'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한해 동안 정부 교육예산(28조 1천억 원)과 학부모 부담 납부금(17조 3천억 원) 등을 합친 공교육비는 GDP의 7.6%인 45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비율은 미국(GDP 6.4% 8년 기준), 일본(4.7%), 프랑스(6.2%)등 주요 선진국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정한 GDP대비 사교육비 추정 규모(2.9%)까지 감안하면 한국 경제의 올해 총교육비 지출액은 GDP의 10.5%인 62조 7천억 원로 추정됐다. 실제로 LG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국제비교로 본 교육투자 효율성'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투자 효율성 지수'는 8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대상 23개 회원국 중에서 19위에 머물렀다. '교육투자 효율성 지수'는 OECD에서 발표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학 및 과학성적 합계와 GDP대비 교육투자비용의 비율을 지수화해 산출한 것으로, 네덜란드(132)와 일본(131), 체코(121), 아일랜드(121)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한국과 함께 미국(86), 스웨덴(84), 덴마크(78) 등은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국가로 평가됐다.

등록금은 학생교육 위해 사용 장려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9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사립대학법인 및 재정관계자 회의를 열고 이월·적립금 논란과 관련 "대학이 교육보다는 '몸집 불리기'에 치중한다는 비난여론이 높다"고 지적하고 "전입금·기부금 수입의 범위 내에서 적립금과 이월금을 명확히 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비 환원

율이 낮다는 지적과 관련 "일부대학에서 건물 신·증축 등 자산 증가에 과다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직접 교육비에 적절한 투자를 요망한다"고 전달했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등록금은 학생교육을 위해 사용하고, 적립금은 법인 전입금과 기부금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는 최근 5년간 사립대학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액보다 많은 금액을 이월·적립금으로 남기면서도 실험실습비나 도서구입비 등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된 지출에는 인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 다시 추진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교직원노조의 집단 반납 투쟁을 불러온 교원성과상여금을 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월 29일 열린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교원 성과급을 '능력개발지원비'로 바꿔 모든 교원에게 주되 10%는 모범교원을 선발해 전체 예산의 15~20% 이내에서 포상금 형태로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5월 3일 밝혔다. 모범교원 선발 기준이나 절차 등은 학교별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 결정하되 모범 교장과 교감은 교육청에서 선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은 일반 공무원과 같은 4단계 차등지급 방안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해 성과급 지급 방식에 대해 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최근에는 교원단체끼리 합의하면 자율 연수지원비 형태로 일률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도권 대학원대학 신·증설 제한

수도권에 있는 대학원 대학(학부없이 대학원 과정만 있는 대학)의 신·증설이 연간 300명 이내로 제한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월 6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하고 다만 컴퓨터·통신·디자인·영상·신소재·생명공학 등 첨단전문분야의 대학원 대학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금까지 대학원 대학은 수도권 총량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수도권 과밀화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현재 전국 18개 대학원 대학 중 15개(83%)가 수도권에 있다. 위원회는 또 산업, 전문대학의 수도권 집중이 계속됨에 따라 지금까지 전년도 전국 정원 총증가자수의 20%이내로 제한해온 수도권내 산업, 전문대학 증원허용 범위를 10%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 걸쳐 부분 개발하거나 연접해 개발할 경우 각 사업면적을 합산한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올 대입 수시모집 합격자 정시·추가모집 지원 금지

정부는 5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과다한 중복지원을 막고 적정한 지원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학입시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람은 같은 학년도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이나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4학년

도부터 대학 입학정원의 3% 이내 범위에서 정원 외로 동일계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성적 보안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5월 26일 수험생 점수에 따른 전국 각 대학의 서열화를 막고 사설 입시기관으로의 수능성적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수능성적에 대한 보안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우선 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각 대학에 배포했던 수능성적 CD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고유번호를 알아야만 수험생의 점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각 대학도 자기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의 점수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학들이 수능성적을 열람 할 수 있는 수험생 수를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올 수능시험부터 각 대학들도 전체 수험생의 수능점수를 열람할 수 없게 되며, CD가 학원 등에 넘어가더라도 수능성적이 유출될 가능성은 적어 졌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대학에 전형편의를 위해 전체 수험생 개개인의 수능점수가 담긴 CD를 배포해 왔으나 보안장치가 없어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개하지 않았던 총점 누가분포표의 작성이나 수능성적 유출 가능성 등이 우려돼 왔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외부 유출 가능성도 문제지만 대학들이 70만 명이 넘는 수험생 모두의 성적을 열람하게 되면 점수에 따른 '대학간 줄세우기'가 우려되기 때문에 보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GIS 교육 대학 5개 선정

정보통신부 및 한국정보통신교육원은 지리정보시스템(GIS) 전문인력양성 협력기관으로 전국 5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6월 3일 밝혔다. 이번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 · 경기 지역의 서울시립대 · 인하대학교 ▲영남권의 한동대학교 ▲호남권의 순천청암대학교 ▲중부권의 남서울대학교 등이다. 또한, 외부 협력기관으로는 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과 지리정보소프트웨어협회(KOGIS) 등 2곳이 선정됐다. 정통부는 "협력기관의 다변화를 통해 GIS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많은 GIS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 협력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협력기관으로 선정된 대학과 기관은 장 · 단기 GIS 교육 과정을 개설해야 하며, 일정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山 인근 대학들, 신축건물 높이 규제

서울시는 6월 6일 관악산, 개운산, 안산 등 주요 산의 주변 경관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인근 대학들의 신축예정 건물 층수를 낮추거나 위치를 바꾸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 · 연세대 · 고려대 등 9개 대학 총 18개 동의 건물 높이가 낮아지게 됐다. 서울대 대학원 기숙사는 18층에서 9층으로, 연대 신학선교센터는 5층에서 4층으로, 고대 환경대학 신관은 7층에서 5층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그밖에 위치조정 혹은 규모축소, 건립보류 결정 등을 받은 대학도 있었다. 이는 과거 대학이 건물신축, 도로 · 주차장 확충을 할 때 자치구의 허가만 얻으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주변 경관 · 자연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0년 7월 세부조성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심의를 받도록 법을 개정한 뒤 취해진 조치이다.

대학생 900명 해외 우수 IT 연수

정보통신부는 2001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 정보통신 대학 및 대학원생 900명을 해외우수 IT교육기관에 파견키로 했다고 6월 10일 발표했다. 올해는 총 42개

학교에서 2,174명이 신청해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사업은 정통부가 국제경쟁력 있는 IT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생이 미국, 캐나다, 인도 등 해외 우수 IT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현지 교육(인턴쉽 1개월 이상 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비지원은 학생 1인당 700만원(총 소요비의 50%까지)까지다. 선발기준은 IT전공자와 영어 구사능력의 높은 사람 위주였으며 선발된 학생은 여름학기와 겨울학기로 나누어 6개월에서 1년간 해외교육기관으로 연수를 떠나게 된다. 파견될 교육기관은 미국, 캐나다, 인도, 호주 지역의 IT 교육기관이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파견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은 6개월 과정은 15학점, 1년 과정은 30학점 이상을 인정받게 된다. 한국의 해당 학교에서는 정상적으로 학비를 받아서 이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되돌려 주는 형태로 지원하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공계 대규모 장학기금 조성

정부는 이공계 진학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수출 주력산업의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우수 고교생과 대학생 5천명씩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산업자원부가 6월 11일 발표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종합대책에 따르면 자동차 · 전자 등 주력 기간산업의 10개 업종 단체와 정부가 분담하는 산업발전장학기금을 올 하반기까지 조성해 내년부터 매년 고교생 3천명(1인당 1백만원)과 공대생 2천명(1인당 5백만원)에게 1백3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올해 1백26억 원이었던 산업기술인력 관련 예산을 내년에 1천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매년 공과대학생 1천명을 뽑아 1인당 1천만 원씩을 지급,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첨단산업 기술현장에서 1년간 연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1천명을 선발, 연구소들이 1년간 임시 채용해 핵심기술을 익히도록 한 후 취업을 알선해 준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병역특례제와 관련해 전문연구요원 수를 현재의 3천명에서 5천명으로 늘리고, 의무복무기간도 60개월에서 42개월로 줄이는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키로 했다. 특히 전문 연구요원 정원 내에 5백명 규모로 6개월간 훈련을 통해 병역을 끝내는 과거 석사장교제도와 같은 박사장교제도를 한시적으로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공대 학사과정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1년만에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는 공대 학 · 석사제도 개선 방안도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 학생 선발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의 제4기 학생 52명이 선발됐다. 산업자원부가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벌이는 이번 선발에는 대학(원) 재학생 또는 졸업생 242명이 응시했으며 합격자 평균 토익점수가 910점대, 무역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18명이나 됐다고 산자부가 6월 5일 밝혔다. 특히 여학생이 27명으로 남학생(25명)보다 많았다. 합격자들은 7월부터 2개월간 국내에서 무역실무강의 및 현장교육을 거친 뒤 9월부터 6개월간 미국, 중국, 일본 등에 있는 우리기업 해외지사에서 연수를 받는다. 국제교육진흥원이 오는 7월 1일까지 멕시코 정부 초청 한국인 장학생 선발을 위한 지원서를 받는다. 이번에 선발하는 멕시코 정부 초청 장학생은 석사 또는 박사과정생 2명으로 지원자격은 35세 미만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학부 성적이 80점 이상이고, 스페인어로 수학할 능력이 있으며 지정된 멕시코 대학의 입학

허가를 미리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 · 멕 문화교류 협정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멕시코 장학생 선발은 특히 올해가 한 · 멕 외교 수립 40주년을 기념하는 해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으며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수업료 면제와 소정의 생활비 지급 등의 특전이 주어진다

대학 평가 통한 재정 지원 계획 확정

평가와 지원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던 교육인적자원부의 2002년도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확정돼 4개 사업 분야에 총 2,750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이르면 8월 초 각 대학에 배정된다. 특히 올해 평가는 대학 담당부서의 부담을 고려해 통합 평가를 실시하며, 교원의 인사관리나 학생 선발 분야가 추가되는 등 공통 지표 일부가 수정돼 대학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6월 각 대학에 통보한 '2002년도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통합 평가 계획'에 따르면 대학 다양화 · 특성화 사업에 배정된 9백80억 원을 비롯, 국립대 발전 계획, 공 · 사립대학 시설 · 설비, 국립대 실험실 습기자재 확충 등 4개 사업 분야에 모두 2,750억원으로 지난 해보다 217억 원 늘어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히 이번 평가에서 대학전담 부서가 비슷한 자료를 중복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 일괄적으로 자료를 받아 통합 평가를 실시키로 했으며 평가지표는 대학의 요구와 새로운 정책 방향에 따라 일부 수정했다. 특히 평가에 반영되는 공통지표는 지난 해 5개에서 6개 분야로 늘어났으며, ▲교육여건 개선 ▲교육 내실화 ▲연구의 질적 고도화 분야는 지난 해와 같지만 ▲경영합리화 ▲정책 유도 분야는 제외됐으며 대신 ▲교원의 인사관리 ▲학생 선발 ▲지역사회와 협조 등 3개 분야가 공통지표에 추가돼 변화된 현실을 반영했다. 대학들은 이에 따라 6월 29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 양식에 의거, 제정지원 신청서를 내야하며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 중 35명으로 구성된 분야별 평가위원들의 서면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8월 초 사업단위별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2005학년도부터 대입 수능 반영 영역 줄인다

현재 고교 1학년생들이 치를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는 언어 · 수리 · 외국어 영역 가운데 2개 영역 이내의 수능성적만 대학입시 사정(査定)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과정의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교과목 성적이 모집시기(수시 1 · 2학기, 정시모집)별로 학생부 성적의 20~50%까지 반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05학년도 학생부 · 수능 반영방법 기준을 각 대학에 제시하고, 7월 20일까지 학생부, 수능 세부 반영계획을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이 제출한 학생부 · 수능 반영계획은 8월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다.